## 野심찬 후보들, 현금 제공 등 '일단 지르고 보기' 공약 난무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들 공약 살펴보니

재원 마련 방안 불투명해도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 약속 지역 현안 해결보다 정권교체 등에 초점…군수선거 의미 퇴색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현금 공약 등만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박빙의 선거 경쟁으로 각 당 대표들까지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지자체장의 중요 역할인 지 역 현안 해결보다는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방선거의 의미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을,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65세 이상 간병 지원금 150만원을,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지역 소멸 대응 영광군민수당' 100만원을,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매월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물론 각 후보들은 현금 지원 공약 외에도 대표 공

약으로 장세일 후보 군민 평생 연금시대, 건강복지 타운 조성, 장현 후보 청렴군수실 운영, 초중고 학 생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이석하 후보 365일 24 시간 어린이 공공병원 개설, 우리마을 요양원 건 립, 오기원 후보월 1만원 공공임대주택, 농정 혁신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군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매년 50만원 기본소득, 만 25세 청년층에게 5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U-턴 지원금', 연 100만원 청년기본수당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현금성 지원 공약에 비판적인 당론에 따라 현금 지원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3명까지 출산 지원금 1억원 지원을 공약했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역시 '곡성행복지원금' 연 100만원 지급과 18세 이

하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현금성이 아닌 대표 공약으로는 조상래 후보가 곡성 전역 관광벨트 연결과 버스 무료 운행 등을, 최봉의 후보는 국립의과대 동부권 유치와 곡성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박웅두 후보는 마을요양원 설립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이성로 후보는 도시개발형 IT 융합 단지 구축과 기차마을 디즈니랜드형 특성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이 대표 공약보다는 현금 지급 공약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면서,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금성 공약 실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실제 각 후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 일몰제 운용,

일반 운영비·시설비 예산 절감, 예산 효율성 강화에

따른 예산 마련, 중앙정부 보조금·지원금 활용 등 명확하지 않은 재원 조달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는 상확이다

후보들은 또 에너지 산업 기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서해안 철도 건설 등 중앙부처 등의 도움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형 사업들도 경쟁적으로 제시해 선거 공약에 대한 주민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임기가 불과 2년에 불과한 재선거 후보들이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로 비칠수 있다"며 "특히 재선거는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실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감 시작…야 '김건희 의혹' 총공세

광주시·전남도, 시·도교육청, 한전 등 국감 준비 분주

## 17개 상임위 802곳 감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 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으나,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 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 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 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 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 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 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공기관도 국감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가 오는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 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국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의 국 감이 예정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대전 고법·고검에서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과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연다. 행정안전위원회 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감을 하고 오후에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한다. 광주시 국 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고 이 후 광주경찰청 국감도 이어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del>공동</del>취재단〉

## 尹, 동남아 3국 순방…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 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했 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 부 제1차관 등이 서울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배웅했

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 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자 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하고, 이상민 장관의 등 을 두들기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 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첫 행 선지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한 뒤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전 참 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 등에 참석 해다.

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